



산업 > 산업일반

전경련, 온실가스배출·화평법 등 산업계에 부담 "재고해야"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5-12-16 11:00:00 송고

재계가 온실가스 배출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급격하게 규제가 도입돼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은 자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현행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 새로 시행되는 환경규제 】

시기	2015년	2016년	2017년
시행 규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주요 규제 사항	- 온실가스 저감, 배출권 구매 - 화학물질정보 파악, 등록, 신고·보고·위해성 평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신청, 진열·보관·운반계획서 및 정외영향평가서 등 제출	오염물질 유출 및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 보험 가입	- 주기적으로 동일 업종 내 최적가용기법(BAT)에 준하는 기술 도입 - 자원순환 목표 달성 의무, 폐기물 처리비용 외 소각이나 매립비용 추가 부담

· 참고 : CO₂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2020년까지 시행연기 되었으나,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상황

© News1

한국은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 등을 도입했고 2016년엔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2017년엔 환경오염 시설 통합관리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환경 규제로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반면 주요 경쟁국가들은 자국의 기술수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강도를 설정하고 있다.

EU는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경쟁우위가 있는만큼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했지만 미국, 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등은 2005년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화학물질 규제도 약한수준으로 도입해 기업들의 대응 시간을 배려했다.

한국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환경 정책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보너스-멜러스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근간이다. 제도 도입 당시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은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엔진과 소형차 제작에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2008년 CO2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자국의 완성차 업체들을 보호했다. 보너스-멜러스 제도가 시행된 2008년 르노와 푸조 등은 전년대비 2.1% 매출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도입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강도 및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규제는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환경규제는 강화된 반면, 친환경 기술개발

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폭 후퇴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법안만 강화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